

정부부처 조직개편·가상자산 제도화 등 ‘연착륙’ 관건

금융권 과제

재편과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
가상자산시장, 입법속도에 성패
정책상품 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기재부 권한 축소 전망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



지난달 27일 강남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간담회’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오른쪽 여섯번째)과 및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촬영 직후 비공개 시장 참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승진 기자

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

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

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정비사업·신도시·공공택지 등 공급축별 로드맵 필요”

부동산 전문가 제언

실수요자 중심 정책 등 과제로 꼽아
“스트레스 DSR 3단계, 보완책 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혼선 해소, 정책 일관성 확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 공급 혼선 끝내야…공공 착공 시급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8일 “정비사업, 신도시, 공공택지 등 공급축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 여건이 어려운 현재,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착공 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금융·조세의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방 양극화 해소해야”

서울과 지방 격차는 단순한 주택 수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

가 아닌 생활 인프라 집중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지역을 떠나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야 한다는 것.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육·교통·일자리 등 정주조건을 지방에 분산해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5·3·3특 구상(수도권 일국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이 지방 자족

성 강화의 해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중심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2, 제3의 수도권을 육성하고 양도세 완화 같은 세제 유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실수요자 정책, 핀셋보다 단순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책 필요성엔 견해가 엇갈렸다.

송 대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양 수석은 “청년층 미래소득을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핀셋형 정책은 제

도 복잡성만 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 대출 규제는 유지 기조 속 보완 필요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울과 지방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은 대출 확대 억제에 긍정적”이라며 “미래소득 기대자에겐 모기지 보험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팀장은 “지방에 한한 규제 완화 여

지는 있으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장기 공급 정책, ‘양보다 질’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 전환에 있어 실행력과 수요 대응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엔 양보다 노후 주택 정비 등으로 주거 질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급은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비사업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나 인허가 간소화가 없다면 공급 시차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제도 재점검과 시장 흐름

전세제도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전세는 겹투자·강동전세 등 부작용이 누적된 제도다”라며 “월세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팀장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유효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포모 수요는 줄며 거래가 주춤하다”며 “하반기엔 서울 신규 분양 재개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w13@

제약·바이오업계 “약가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

“기업 R&D 지원 확대 시급”

제21대 정부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K제약·바이오 후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확립,

약가제도 정비,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단계 임상과 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신약 개발, 기술수출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R&D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약가제

도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협회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회의약품협회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산·학·연·관이 하나 되는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예측 가능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 바이오엑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은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전문성과 정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